

# 속도 못 내는 여당·정부...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

윤·한 만찬 회동서 해법 못찾아  
野 일각선 정부 뺀 협의체까지 거론  
우원식 “국민의 시간표 보면 시급”

정기권에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도 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협의체 구성을 공개 제안했지만, 25일 현재까지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고, 정부 여당에서도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야당 일각에선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 협의체’를 먼저 출범시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만찬 자리에서는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공식 회동이 두 달 만에 성사되면서 협의체 출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장 해법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정은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등을 협의체 의제로 열여뒀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의대 증원 조정은 대입 수시 모

집이 시작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협의체에서 의제로 삼아 논의는 할 수 있다는 게 한 대표 입장이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안인 만큼 일단 의제로 열어두고 의료계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시점과 참여하는 의료단체 등의 윤곽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더 지체되면 협의체 구성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지지부진하자, 야당에선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 출범까지 거론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지난 23일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 협의체’ 출범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의료계 설득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와의 이견도 좁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정이 뜻을 모은다고 해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대표성 있는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당과 정부가 합의점을 찾아 의료계를 설득해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쉬운 상황이 아니다.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 국방승기자클럽(BJC) 초청 토론회에서 “정치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대화하고 설득하는 타협하는 정치가 바로 그렇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민생 공통 공약 추진 같은 일은 국민의 시간표를 보면 아주 시급한 일”이라며 여야에 조속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시간은 국민에게 위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이 보기에 시급한 현안 특히 민생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최상목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예정대로”

“불확실성 줄이는 방법 폐지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 합병·물적분할 등으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일반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고, 종합부동산세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을 둔화, 사회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투자와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는 각자 처한 여건에 따라 가장 필요한 지원을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제공해 정책 체감도를 높ی겠다”고 강조했다. 입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조세 인하 등 내수활성화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사위는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법안은 재판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춘 이들을 경력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게 취지다. 개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서울=김선욱 기자



부산 범어사 찾은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방문, 방장 정여 대종사와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尹 “민관 함께 출산율 반전 모멘텀 만들어야”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참석

“출산율 반등의 희망 보이고 있다”  
“일·가정양립 중기에 세무조사 유예”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 혜택과 국세 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기업들에 감사를 표하면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수와 혼인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이 기업에 미치는 순기능을 강조하며 “직원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게 기업에게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오히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맞춰 일 가정 양립을 잘 추진한다면 고용, 노무 여건이 개인별 맞춤형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국 일 가정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증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일·가정 양립의 토양이 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겠다”며 “중소중견 기업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민주 “檢, 최목사·김 여사 모두 기소하라”

“본질은 청탁금지법 위반”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에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처분을 권고한 것을 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집중 부각했다. 전 최고위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청탁을 받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즉시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 행위가 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해서도 “만약 이 사안이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알선수재죄 그리고 김 여사와 경제적 공동체인 윤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혹은 포괄적 뇌물죄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15명의 위원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서울=김선욱 기자